

모순에 빠진 르노 자본, 70% 출근한다면서 직장폐쇄

르노 지회·노조 기본급 인상·직장폐쇄 저지 상경 투쟁 ... 지회, “모든 르노삼성 노동자 단결로 승리”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르노삼성 자동차지회와 르노삼성자동차노동조합이 수년간 동결한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게릴라 파업을 벌이자 르노 자본은 파업 참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기한 부분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르노삼성지회와 르노삼성노조는 공격적 직장폐쇄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물러서지 않고 더욱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와 르노삼성노조는 1월 10일 서울 강남구 르노삼성 본사 앞에서 ‘2019년 임금교섭 완전 쟁취와 공격적 직장폐쇄 저지를 위한 상경 투쟁대회’를 열었다.

지회와 노조 조합원들은 “르노 자본은 수년간 수천억 원의 흑자가 났는데도 기본급 동결과 상여금 쪼개기 등으로 노동자 피를 빨고 있다”라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높였다. 지회와 르노삼성노조는 1월 8일과 9일 게릴라 파업을 벌이며 르노 자본을 압박하고 이날 본사 상경 투쟁을 벌였다.

르노 자본은 상경 투쟁에 맞춘 듯 기습으로 부분 직장폐쇄를 자행했다. 르노 자본은 노조의 파업 때문에 수천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등 회사 존립마저 위협에 처했다며 모든 책임을 노조로 떠넘겼다. 르노 자본은 ‘근로 희망서’를 제출하면 조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파업 노동



자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르노 자본의 이번 직장폐쇄는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다. 사측은 입장문을 통해 “노조의 전면/돌발/지명 파업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의 조합원들이 정상 출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르노 자본, 노조 때문에 망한다고 선동 교섭 나가면 백기투행했다고 거짓말

직장폐쇄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며 직장을 점거한 상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허용한 방어 수단이다. 르노 자본은 “파업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대부분 ‘정상 출근’한 상황”에서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누가 보더라도 노조를 무릎 꿇리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임을 부인할 수 없다. 르노 자본은 지난해 6월에 직장폐쇄를 강행하며 타격을 눈앞에 두고 교섭을 뒤집었다.

정종훈 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장은 투

쟁사에서 르노삼성자동차는 차를 팔수록 적자가 나는 이상한 회사라고 지적했다. 정 지회장은 르노 자본이 국내 공장 노동자들에게 빨대를 꽂고 피를 빨고 있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정종훈 지회장은 “2012년에 적자를 핑계로 1,000명의 노동자가 회사에서 쫓겨났다. 2013년부터 흑자를 냈지만, 르노 자본은 계속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정 지회장은 “르노 자본은 노조가 파업하면 매출 손실로 회사가 망한다 선동하고, 교섭에 나서면 백기 투항했다고 거짓말을 퍼트린다”라며 비판했다.

정종훈 지회장은 “르노 자본의 노동자 갈라치기에 맞서 금속노조와 함께 르노삼성의 모든 노동자가 단결해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박종규 르노삼성자동차노조 위원장은 “공장에서 10년, 15년 넘게 일한 노동자들이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게 르노삼성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종규 위원장은 “사측이 일부러 교섭을 지연하며 시간만 끌다가 내놓은 제시안이 기본급 동결 대신 1백만 원 지급과 최저임금법을 피하기 위한 상여금 쪼개기다”라며 사측 제시안을 비판했다.

투쟁 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본사에 교섭을 요구하며 진입을 시도했다. 사측은 문을 걸어 잠그고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사측 노조 파괴 항의’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법정구속

항소심서 형량 늘어 ... 금속노조 “사법폭력, 편향적 판결” 규탄

2018년 11월 사측의 노조 파괴 행위에 항의하다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일부는 만기 출소한 지 보름 만에 재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월 8일 유성기업 노동자 다섯 명에 징역 1~2년을 선고, 이들을 수감했다.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은 회사 임원에게 2011년부터 계속된 노조 파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두 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지난해 말 만기 출소했다. 나머지 세 명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만기 출소한 두 명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한 세 명은 징역 1년~1년 6월을 받고 간헐했다. 형량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금속노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직적인 사전 공모라 판단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충남지부·유성기업

아산지회는 1월 9일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유성지회 조합원 실형 선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도 없이 형량을 높였다. 사법폭력이다”라고 비판했다.

심준보 판사, 유성기업 노조 파괴 목적 해고 정당 판결도

유성기업지회 변론을 맡은 김차곤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결과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차곤 변호사는 “1심과 다른 사실이 없으면 원심 양형 판단의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이번 항소심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특히 항소심 재판을 맡은 심준보 판사의 편파 재판 진행을 지적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성기업지회에 따르면 2013년 심준보 판사는 유성기업이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노동자 열한 명을 해고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전례가 있다. 사측은 이

판결을 근거로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무차별 해고와 징계를 저질렀다.

정용재 노조 충남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2013년 해고 사건을 법원이 처음부터 제대로 판결했다라면 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며 “유성기업 편에

서서 회사에 힘을 실어주려는 판사가 편향된 판결을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파괴를 주도한 이들에 대한 엄중 처벌 요구도 이어졌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10월에 벌금 오백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노조 와해를 위해 창조컨설팅에 자문료 명목으로 회삿돈 13억여 원을 지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1월 10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유시영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특경법 위반죄가 매우 중한 범죄인만큼 법원은 유시영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월 8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의 편향성을 비판하며 “법원이 유시영 회장 항소심 선고에 최소한의 형평을 유지하고, 노동자들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경고했다.

‘포스코, 이상은 배려와 나눔, 현실은 노조 파괴·산재왕

검찰·노동부, 1년 4개월 만에 부당노동행위 압수수색 진행 ...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 대책 마련 촉구

포스코의 노조파괴 행위에 뒷짐만 지고 있던 검찰과 노동부가 1년 4개월 만에 뒷북치기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무원들이 노조파괴 범죄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 포스코 노동자들은 부당해고와 징계를 받았고, 노조는 쪼그라들었다. 포스코에서 연

이은 산업재해로 2018년과 2019년 두 해 동안 원청과 하청 노동자 아홉 명이 죽고 오십여 명이 다쳤다.

검찰과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0일 포스코 포항 본사와 광양제철소, 충주 데이터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2018년 9월 포스코가 ‘금속노조 무력화 문건’을 작성해 실제 노조 파괴 음모를 실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정우 회장 등 관련자 27명을 검찰과 노동부 포항지청, 여수지청에 고소한 사건에 따른 것이다. 검찰과 노동부는 지회의 고소 이후 무려 1년 4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광주전남지부는 1월 8일 각각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지청 앞에서 ‘포스코 엄중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지부는 포스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



찰과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에 대해 “늦어도 너무 늦은 만시지탄”이라며 “검찰과 노동부는 이번 압수 수색을 시작으로 포스코를 엄중하게 수사하라”라고 촉구했다.

두 지부는 ▲부당노동행위 범죄 피의자 최정우 회장 소환 조사 ▲원하청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와 산재 은폐, 산업재해 사고 특별근로감독 실시 ▲부당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 ▲원·하청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논의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두 지부에 따르면 포스코는 부당해고와 징계, 부서와 공장별 금속노조 탈퇴 경쟁 유도 등은 물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 일화 제도를 악용해 금속노조 교섭권을 무력화하고 있다. 포스코에 금속노조가 들어서자 사용자성이 있는 직원까지 회사가 만든 기업노조에 가입 시켜 교섭 대표노조로 만들고 있다. 포

스코 원청뿐 아니라 금속노조에 가입한 사내 하청 사업장 열한 곳에도 이미 기업노조가 들어섰다.

포스코는 산재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업장이다. 지난해 12월 13일 광양제철소 냉연공장에서 냉각수가 노동자들이 먹는 음용

수에 유입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회는 노조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자고 했다. 사측은 냉각수 성분은 공개하지 않고 자체 수질분석 결과 음용수 기준을 충족한다고 발표했다. 사측은 오히려 음용수 사고를 언론에 제보한 노동자를 색출한다며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다.

12월 24일에 포스코 광양제철소 공장 발전설비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다섯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19년 광양과 포항제철소에서 다섯 번의 폭발과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1월 7일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항제철소를 압수 수색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최정우 회장은 새로 홈페이지까지 만들며 정체불명의 포스코 윤리경영 방침인 ‘기업 시민’만 강조하고 있다.